

2022년 5월호

상용차 산업 동향

1. 윤석열 정부 상용차 정책 주요 내용과 과제
2.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묻는다.
3. 상용차 산업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금속전북대책위 소식
4. 민주노총전북본부군산시지부와 더불어민주당군산시장 강임준 후보 군산시노동정책협약 체결

2022.05

상용차 산업 동향

발행일 | 2022. 5.

발행인 | 손덕현, 서영우, 유준, 염경석

발행처 | 상용차산업 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금속 전북대책위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 전북노동정책연구원

편집인 | 유기만(010.9887.7659)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57 3층

윤석열 정부 상용차 정책 주요 내용과 과제

2022년 5월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10대 국정과제 중 상용차 부분은 별도로 있지 않으나 대략적인 방향은 윤석열 정부도 역시 ‘디지털 혁신과 그린 전환’이라는 정책 방향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대동소이하다.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 중 “디지털 혁신 : 가상 협업공장 구축(27년까지 50개), 제조 현장의 로봇 개발·보급 등을 통해 생산 공정의 최적화”, “(그린 전환) 저탄소 시대를 선도하는 제조업의 그린전환을 가속화”를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용차와 관련해서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 상향,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재수립, 조기 폐차 지원 대상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 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 설정 추진,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지역 확대(수도권→6대 특·광역시)” 등이 있다.

또한 4월 27일 인수위가 발표한 균형 발전 지역공약 보고서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북도 상용차 산업 관련한 공약은 다음과 같다.

“- 미래상용차 산업벨트, 자율주행 시험평가 단지 구축, -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및 그린 수소 전주기 산업생태계 조성¹⁾

상용차 신문에 소개된 윤석열 정부의 지역별 상용차 공약은 “소형 화물차 특화 e-모빌리티 산업을 강원형 핵심 산업으로 적극 육성을 내세웠으며, 상용차 생산공장이 밀집한 전북에는 친환경 미래형 상용차 생산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자율 주행 실증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공약²⁾을 선보였다.

1) [균형발전 지역공약] 2022.4.27.,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위 업무보고 별첨자료

2) 출처 : 상용차 신문 <http://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88>

군산을 중심으로 미래상용차 거점 구축과 완주를 중심으로 한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구축이다. 이 또한 문재인 정부의 계획과 대동 소이하다. 하지만 여전히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상용차 산업 정책은 구체적이지 못하다.

전라북도의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중 상용차 산업 관련한 부분은 “친환경 전기차 부품 소재 특화 기반 강소연구특구개발특구 육성 추진 (군산강소특구 연구소 기업설립 7개사, 특화기업 지원 2022년 57억 원)”, “산업용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전북형 30대 핵심부품 개발 (2020년~2024년 1,961억 원), 3단계 상용차 자율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사업 (2020년~2024년 1,214억 원)” 등이다.

금속노조 상용차 대책위는 지난 정부 때부터 다음과 같이 몇가지를 요구해 왔다.

첫째, 자동차 산업 중 승용과 상용 부문을 나누어서 정책 과제가 수립되어야 하며 지난 정부가 승용 중심의 자동차 산업 정책으로 상용 부문이 기업과 정부로부터 소외되어 온 결과 상용차 산업의 위기가 도래했기에 상용차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을 요구해 왔다.

둘째, 소형과 버스 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배출 차량 전환 정책으로 버스 부문은 갈수록 수입차 비중이 높아 지고 있으며 소형 트럭 또한 한국이 중국산 전기차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기업에 촉구해 왔다.

셋째, 코로나 19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 부품사의 경영상의 어려움과 고용 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금속노조의 요구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큰 틀에서 그린 전환에 동의하고 이를 가속화하려 한다면 그에 걸 맞는 부문별 정책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묻는다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 인사 청문회 주요 내용 요약

지난 5월 9일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의 인사 청문회가 있었으며 이후 이창양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고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상용차 산업에 대한 이창양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으며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가장 많은 질의를 했다. 다음은 이창양 산업자원부 인사 청문회 내용 중 상용차 산업 부문에 대한 질의 응답 요약이다.

류호정 의원(정의당)

질의)

중대형 상용차 산업은 한국 자동차 산업을 성장시키는 성장 동력이자 중요 산업임. 상용차 관련 노동조합과 전라북도 노사정협의체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상용차 산업의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답변)

- 전북지역이 우리나라 상용차 생산의 주요 거점으로서 자동차산업·일자리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에 공감함.
- 자동차 산업정책을 수립시 승용·상용 등 차종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취임할 경우 상용차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음.
- 자동차정책기본계획 내에 중대형 상용차 산업계획을 따로 분류하는 것은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취임할 경우 면밀히 살펴보겠음

질의)

군산을 상용차 미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과 현황은 무엇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답변)

- 전북지역이 우리나라 상용차 생산의 주요 거점으로서 자동차산업·일자리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에 공감함
 - 정부는 군산지역의 상용차산업 발전을 위해 상용차 전동화 부품 평가시스템 구축,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전기차 생산 클러스터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취임시 군산의 상용차 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부 지원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겠음

질의)

중대형 상용차의 경우 탄소 배출 심각성에 비해 대응 계획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중대형 상용차의 조기폐차 문제와 미래차 전환에 대한 계획이 미진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답변)

- 정부는 노후 경유 상용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국정과제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 중대형 상용차는 탄소 배출이 많기 때문에 탄소 배출 저감 차원에서 신속한 미래차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취임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음

질의)

상용차 생산공장이 밀집해 있는 전북에 상용차 미래전환을 위한 정부의 연구기관 설립이나 지원 조직 구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답변)

- 상용차는 긴 주행거리와 높은 차량 중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수소상용차 등 친환경차로의 전환 필요성이 높음
- 전북은 현대차(완주공장), 타타대우상용차(군산공장)가 입주해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용차 생산지역이며, 현재 자동차융합기술원(군산 소재), 전북테크노파크(전주 소재) 등의 지원기관이 존재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 등도 전북기업들의 상용차 R&D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상용차의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중요한 만큼 지자체와 상용차의 미래차 전환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및 지원체계에 대해 검토하겠음

질의)

코로나 19 영향, 정부의 전세버스와 시내버스 차령 연장으로 자동차 생산량을 큰 폭으로 감소시켜 부품사 어려움을 가중했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으로 실효성 있는 고용유지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답변)

- 코로나 이후, 국토부는 두차레('20, '21)에 걸쳐 전세버스, 특수여객차량(장례차) 등 버스의 운행연한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운수업체는 구매 부담을 저감한 반면, 버스 제조사 및 부품기업들은 버스 생산량 감소에 따라 경영에서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
- 취임하게 되면, 산업부 차원에서 버스 제조사 및 부품 생태계, 고용 유지 등 측면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



〈질의하는 류호정 의원과 답변하는 이창양 후보자〉

신영대 의원(민주당)

질의)

장기적으로 친환경 경제에 전기차와 수소차 중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답변)

- 수소차와 전기차는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상호보완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함
- 수소차는 장거리주행·고중량 탑재 등의 장점이 있으며, 전기차는 충전인프라 등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음
 - 중대형 트럭, 광역버스 등 상용차에는 수소차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승용차는 장거리



주행 빈도, 주거지·직장 전기차 충전여건 등에 따라 수소차·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함

이학영 의원, 이성만 의원, 이장섭 의원, 정태호 의원(민주당), 권명호 의원(국민의힘)

질의)

새 정부의 수소 산업에 대한 견해는?

답변)

- 수소차·수소충전소·연료전지 보급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 수소차·연료전지(PAFC) 분야 세계 최고기술 확보** 등 활용 분야는 선도하고 있음

* '18년 대비 수소차 보급규모 17배, 충전기 설치대수 8배, 연료전지 발전규모 2배 증가

** (수소차) 연료전지 효율 60%, 내구성 16만km, (연료전지) 발전효율 49%, 종합효율 85%

- 다만, 그린·블루수소 생산 기술수준 향상, 액화수소 등 효율적인 운송수단 확보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판단하고 있음

- 적극적인 R&D 지원, 수소 기술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생산-유통-활용 등 수소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생산 부문은 청정수소 중심으로 전환, 수소 생산방식 다양화 및 국내외 생산기지 구축을 통해 에너지 자급률 제고를 추진

- 유통 부문은 생산과 활용 부문을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수소 인수·저장설비, 배관망, 선박 등 수소 인프라 완비를 추진

- 활용 부문은 수소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버스·트럭 등 상용차 중심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암모니아 혼소 등 수소발전도 본격화할 계획

* 온실가스·미세먼지↓, 전기차 대비 주행거리↑, 충전시간↓

-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30년, '50년 목표는 지난해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한 NDC,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맞춰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 향후 청정수소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면서, 경제성·기술성 속도 등을 감안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임

-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 분야 R&D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여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임

- 수전해·연료전지·수소차·수소선박 등 수소 핵심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하고, 수소 관련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겠음
- 수소 클러스터 기반 지역별 수소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수소 전주기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음
- 또한, 청정수소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면서, 경제성·기술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임.

상용차 산업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금속전복대책위 소식

1. 부품사 실태조사 연구 사업 시작

금속상용차전복대책위와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은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전라북도 자동차 부품사 거래 네트워크별 특성 및 과제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는 전라북도 자동차 산업 부품사 거래 네트워크별 특성 및 과제 연구를 통해 전라북도 자동차 산업 부품사의 실태를 파악할 것이다.

자동차 산업의 현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자동차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향후 산업 전환에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산업 전환이 부품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라도 전라북도 자동차 부품산업 일반 현황과 거래 네트워크 특성 조사가 필요하다.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이 기광지회와 알트론지회를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2. 세움지회 노사정 간담회

5월 24일 정읍 세움 공장 회의실에서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민주노

충정읍시지부와 금속노조전북지부의 제안으로 정읍지역 자동차 부품사에 대한 정읍시의 관심을 촉구 하면서 마련된 자리이다.

간담회에는 정읍시 최재용 부시장을 비롯해 미래첨단산업과 4명과 회사 세움 이석길 대표 외 수 명, 노조 고낙천 지회장 외 2명이 참가하여 진행되었다.

세움은 상용차 머플러를 생산하는 부품사로서 미래차 전환에 따라 향후 감소할 산업이다. 산업전환에 따른 대비가 어느 곳 보다 필요한 곳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해 중앙과 지부 교섭을 통해 산업전환협약을 맺은 만큼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했으며 노사정 간담회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회사와 시에 요구했다.



정읍시 최재용 부시장은 당면하여 정읍시가 국가와 도의 부품사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5월 25일 세움 회의실에서 노사정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3. 대책위 2차 정책위원회



대책위는 5월 20일 오후 1시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6월 20일 22년 1차 상용차 노사정 협의회를 앞두고 노사정 협의회 안전 검토와 대책위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당장 노사정 협의회에 안전이 윤석열 정부의 상용차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는 만큼 노사정 협의회 전에 이에 대한 대책위의 분석 작업이 필요함을 공감했다.

또한 환경부의 수송부문 탄소 중립 이행전략 검토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 만큼 이에 대한 내용 검토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정책위원회의 과제로 선정했다.

민주노총전북본부군산시지부와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강임준 후보 군산시노동정책협약 체결

5월 24일 민주노총군산시지부와 강임준 군산시장 후보의 노동정책협약이 있었다. 노동정책협약에는 상용차 산업과 부품사에 대한 정책 협약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중대형 상용차 및 자동차 산업 육성 및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추구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을 다음과 같이 했다.

• 국가 차원의 중대형 상용차 산업 정책 수립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군산을 미래형 상용차 생산거점으로 공약해 왔음. 또한 전라북도는 중대형 상용차 생산기지로서 중대형 상용차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해 2021년 노사정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 중대형상용차 산업의 경우 전라북도의 정책 의제가 국가 차원의 의제가 되는 만큼 군산을 중심으로 형성 되어 있는 상용차 산업에 대한 노(사)정의 공동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임.

이에 전라북도 상용차 산업 노사정 협의회에 대응을 위해 군산시 상용차 산업 노(사)정 협의체의 구성 등이 요구됨.

• 군산시 자동차 부품사 지원 체계 마련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산업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약 1,000개의 부품사를 미래차 전환에 맞게 지원하겠다는 부품사 지원 계획을 마련하였음. 이에 발맞춰 자동차 부품사가 밀집한 지자체의 경우 미래차 전환 지원센터(대구, 창원, 울산) 등을 활발히 구성하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또한 충청남도의 경우 부품사 지원 조례 등을 통하여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업전환 기 부품사 지원을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음. 또한 군산에 있는 부품사는 여전히 큰 어려움 속에 자력하고 있음. 따라서 부품사 실정에 맞는 지원 등을 위해서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부품사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주력 산업 노(사)정 협의 운영



2022년 4월호

상용차 산업 동향

